

2022  
하반기

오늘의 세계경제 • 세계경제 포커스 • KIEP 기초자료

# 현안대응자료

## 요약 모음집

대한민국의  
선진국 위상 확립을  
선도하는  
대외경제정책 연구기관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 차례 contents

| 발간일         | 제목  | 저자    |    |
|-------------|---|-------|----|
| 2022.07.01. | 미주정상회의 주요 논의 내용과 미·중남미 관계에 대한 시사점         | 이승호   | 01 |
| 2022.07.13. |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국내 전가와 시사점                     | 백예인 외 | 03 |
| 2022.07.15. | 유럽 인플레이션 리스크 확대 및 전망                      | 오태현   | 05 |
| 2022.07.18. |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 평가와 정책 시사점            | 서진교 외 | 06 |
| 2022.07.18. | 아브라함 협정 체결 이후 UAE-이스라엘 경제협력 강화현황 및 시사점    | 손성현 외 | 08 |
| 2022.07.21. |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2022. 7) 및 주요 정책 방향 전망        | 김규판 외 | 10 |
| 2022.08.03. | 유럽의 에너지안보 강화에 따른 대아프리카 협력 확대 가능성 및 시사점    | 한선이 외 | 11 |
| 2022.08.04. | 유라시아 역내 국제남북운송회랑 (INSTC)의 개통 의미와 전망       | 정동연   | 13 |
| 2022.08.22. | 파키스탄 경제 불안 현황과 전망                         | 김경훈 외 | 14 |
| 2022.08.24. | 한·중 수교 30주년: 경제협력 성과 및 과제                 | 현상백 외 | 16 |
| 2022.09.02. | 북한의 코로나19 통제 현황과 전망                       | 한하린 외 | 18 |
| 2022.09.14. | 태평양 도서국을 둘러싼 주요국의 전략경쟁 동향과 시사점            | 박나연 외 | 19 |
| 2022.09.20. | 최근 유럽 이주민 유입 동향 및 정책 시사점                  | 장영욱 외 | 21 |
| 2022.09.27. | 미국의 대중국 AI 반도체 수출규제 영향과 시사점               | 김혁중   | 22 |
| 2022.09.28. | 인도 농산물 수출 증가의 대내외 요인과 시사점                 | 김도연   | 23 |
| 2022.10.17. | 2022년 케냐 대선 이후 신정부 정책 방향 및 시사점            | 정민지   | 25 |
| 2022.10.24. | 부탄의 대인도·중국 균형전략과 시사점                      | 김경훈   | 27 |
| 2022.10.27. | 중국 20차 당대회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허재철 외 | 28 |
| 2022.11.10. | 2023년 세계경제 전망                             | 안성배   | 30 |
| 2022.11.21. | 미국 중간선거의 정치·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 강구상 외 | 31 |
| 2022.11.22. | 최근 미국의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정책 강화 동향과 시사점 | 박혜리   | 33 |
| 2022.11.30. | 글로벌 물가상승에 대한 아세안 주요국의 대응과 시사점             | 조승진 외 | 35 |
| 2022.12.05. | '메이크 인 인디아' 성과와 시사점                       | 김경훈   | 37 |
| 2022.12.05. | 영국의 중기재정정책(2023~28년)의 주요 내용 및 평가          | 임유진   | 39 |
| 2022.12.08. | 주요국의 ESG 성과 평가 실태 및 시사점                   | 박지원   | 41 |
| 2022.12.09. | 2022년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최인아 외 | 42 |
| 2022.12.16. | 2022년 네팔 총선 결과와 집권당의 과제                   | 김도연 외 | 44 |
| 2022.12.21. | 한국-베트남 수교 30주년 경제적 성과와 향후 과제              | 곽성일 외 | 45 |
| 2022.12.22. | 에너지 안보 위협에 따른 중동의 부상과 시사점                 | 강문수 외 | 47 |
| 2022.12.27. | 유럽의 에너지 위기 동향 및 전망                        | 장영욱 외 | 49 |



# 미주정상회의의 주요 논의 내용과 미·중남미 관계에 대한 시사점

이승호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부연구위원 (seungholee@kiep.go.kr, 044-414-1211)

## ◎ 2022년 6월 6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제9차 미주정상회의가 개최되었음.

- 미국이 당초 구상했던 중남미 내 질서를 실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역내 리더십 회복’을 공언한 바이든 정부가 28년 만에 자국에서 개최하는 미주정상회의를 통해 어떤 구상을 제시할지에 많은 관심이 모아졌음.
- 미국은 ‘비민주적으로 통치되고 있는 국가의 정상은 초청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이번 회의 초청 명단에서 쿠바,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정상을 배제하였으며, 이러한 결정을 둘러싸고 좌파정권이 집권하고 있는 중남미 일부 국가와 미국 간에 불협화음이 발생함.
- 미국은 실제로도 정상회의에 쿠바,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정상을 초청하지 않았으며, 일부 국가는 미국의 비민주주의 국가 배제 결정에 대한 반대의 표시로서 정상을 대신하여 대리인을 파견함

## ◎ 이번 미주정상회의에서는 △ 이주 △ 경제회복 △ 식량안보 △ 기후변화 의제가 주로 논의되었음.

- [이주] 20개국 공동으로 ‘이주 및 보호에 관한 로스앤젤레스 선언’을 발표해 역내 이주 관리에 대한 접근법을 새롭게 마련하였으며, 주요 당사국은 역내 이주민과 난민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공개함.
- [경제회복] 미국은 미주 국가간 경제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경제적 번영을 위한 미주 파트너십’을 발표하였으며, 특히 △ 공급망 강화 △ 투자 증진 △ 청정에너지 △ 지속가능하며 포용적인 무역을 강조함.
- [식량안보] 미주 지역의 대표적인 농업 국가가 주축이 되어 ‘농업 생산국 선언’을 발표함으로써 식량안보에 대한 지역 차원의 관심을 환기함. - [기후변화] 미국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2030 미국·카리브해 파트너십’과 ‘중남미·카리브해 재생에너지이니셔티브’ 발표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지역 차원의 대응을 촉구함.

## ◎ 미주정상회의의 개최 과정에서 발생한, 각국 정상의 참석 여부를 둘러싼 불협화음과 회의 중 나온 일부 정상의 발언 등으로 비춰볼 때, 중남미 내 미국의 영향력 축소는 부정하기 어려운 현실로 보임.

## 미주정상회의 주요 논의 내용과 미·중남미 관계에 대한 시사점

- 민주주의 후퇴와 포퓰리즘 확산 등으로 더욱 복잡해지는 중남미 내 정치적·지정학적 지형을 감안할 때, 미국이 민주주의 및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자국 중심의 역내 질서를 재확립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임.
- 이와 별개로 최근 중남미 주요국에서 민주적 절차를 통해 연이어 좌파정권이 창출되고 있어 미국이 중남미에서 역내 리더십을 발휘할 여지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미주정상회의는 바이든 정부가 중남미에서 축소되고 있는 자국의 영향력을 회복하려는 의지를 재확인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며, 여러 의제에 걸쳐 미국과 중남미 국가 간 협력이 논의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국내 전가와 시사점

**백예인**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거시팀 부연구위원 (yibaek@kiep.go.kr, 044-414-1132)

**한원태**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금융팀 부연구위원 (hanwontae@kiep.go.kr, 044-414-1358)

**김현석**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거시팀 연구원 (hyunsk92@kiep.go.kr, 044-414-1228)

- ◎ [국내외 물가 동향]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기록적인 물가상승이 나타나고 있음.

  - 최근 미국, 유로 지역 등 주요국에서는 전년동월대비 8% 이상의 높은 인플레이션이 관측되고 있으며, 에너지 및 식료품 이외에 근원 인플레이션의 기여도 역시 높아진 상황임.
  - 원자재 중심의 수입가격 상승과 공산품 위주의 생산자가격 급등으로 인해 2021년 이후 모든 국내 물가지수가 오르고 있으며, 전년동월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6월 6.05%로 집계되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 ◎ [품목별 전가율] 최근 가격이 급등한 수입 광산품 품목은 국내 공업제품 물가로 전가되는 파급효과가 크므로 국내 근원물가가 오를 가능성을 시사함.

  - 근원물가 상승률에 상품의 기여도가 높아지는 추세와 상품 품목 내 공업제품의 가중치가 높다는 점에서 최근 원유 등 수입 광산품 가격 급등으로 인해 국내 근원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
  - 품목별 수입물가 상승이 생산자물가 및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대부분 3개월 이내에 반영되며, 늦으면 8개월까지 전가효과가 나타남.
- ◎ [해외 PPI 전가] 우리나라 37개 무역상대국들의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1%p씩 동시에 증가할 경우, 같은 분기에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24%p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 여기서 물가상승률은 모두 이전 분기 대비 기준이며, 글로벌 인플레이션(생산자물가 상품 기준)이 국내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효과는 첫 3개월 안에 거의 모두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남.
  - 3개월 내 국내 소비자물가에 대한 해외물가전가율은 원화 가치 하락에 의한 환율전가율보다 6.8배 더 큰 것으로 추정됨.
- ◎ [전가 구조변화]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기 또는 광산품 물가상승률이 높은 시기일 때 원자재 중심의 수입물가 상승이 생산자물가 및 소비자물가로 전가되는 효과가 바뀔 수 있음.



##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국내 전가와 시사점

- 수입 광산품 가격 상승이 생산자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2020년 중반에 구조변화가 일어났으며, 코로나19 확산기와 미 연준의 통화정책 수정성명 발표시기와 맞물림.
- 광산품 가격상승률이 임계치인 1.3%보다 높으면 소비자물가에 전가되는 효과가 증가하여 국내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질 수 있음.



# 유럽 인플레이션 리스크 확대 및 전망

오태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전문연구원 (asroc101@kiep.go.kr, 044-414-1159)

- ◎ [현황] 유로 지역 및 영국의 인플레이션이 각각 8.6%('22. 6)와 9.1%('22. 5)로 유례없는 수준을 기록하며 시장의 전망치를 상회

  - 유로 지역과 영국의 물가상승률은 각각 '21년 7월과 '21년 9월 이후 연속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으며, 이는 변동성이 큰 에너지 및 식품 가격 급증에서 기인
  - 한편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로 활용되는 생산자물가의 경우('22. 5) 유로 지역에서 2년 만에 처음으로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36.3%를 기록한 반면, 영국에서는 상승세를 지속하며 15.7%를 기록
- ◎ [인플레이션 평가] 유로 지역과 영국의 고(高)인플레이션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통제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상
- ◎ [인플레이션 대응] 유럽 각국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통화정책(금리인상 및 양적완화 정책 종료)과 재정정책(에너지 부담 경감 직간접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

  - 유럽중앙은행(ECB)은 7월 통화정책회의에서 현(現) 제로 금리를 25bp 인상할 계획이며, 영란은행(BoE)은 지난해 12월 이후 다섯 차례 연속으로 금리인상(7월 기준 1.25%)을 단행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응 중
  - 유럽 주요국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각국 상황에 맞는 정책(에너지세 감면, 에너지 요금 규제, 취약계층 지원, 에너지 기업 초과이익 과세, 기업 지원 등)을 마련
- ◎ [전망] ECB와 BoE는 '22년에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전망이며, 50bp 이상의 금리인상(일명 '빅스텝') 가능성 상존

  - '22년 중 대내외 불안정한 여건으로 유로 지역과 영국은 6~8%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 평가와 정책 시사점

**서진교**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선임연구위원 (jksuh@kiep.go.kr, 044-414-1156)

**이주관** 무역통상실 신통상전략팀 부연구위원 (jkleee@kiep.go.kr, 044-414-1089)

**김지현** 무역통상실 신통상전략팀 연구원 (jihyeon@kiep.go.kr, 044-414-1031)

## ◎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에서 제네바 패키지가 성공적으로 도출됨.

- 164개 WTO 회원국들은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개최된 MC12에서 폐막을 이틀 연기한 끝에 제네바 패키지 도출에 성공함.
- 제네바 패키지는 MC12 결과문서, 3개의 '각료선언'(①식량위기 대응 ②팬데믹 대응 ③동식물검역), 6개의 '각료결정'(①WFP 식량구매 수출제한 면제 ②지재권 일시면제 ③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 연장 ④수산보조금 철폐 ⑤소규모경제 ⑥지재권 비위반제소)으로 구성됨.
- 미국이 핵심쟁점에 대한 주요국 간의 입장 절충과 타협을 주도하면서 패키지 도출에 중요한 역할을 함.

## ◎ 제네바 패키지 도출은 WTO 다자통상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성과로 평가할 수 있음.

- 코로나19 백신 불평등·식량위기 확산에 대한 WTO 차원의 대응방안 제시, 다자무역협상 지속을 위한 합의 도출,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은 성과로 평가할 수 있음.
  - 특히 20년 이상 끌어온 수산보조금 협상의 불법어업 및 남획어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금지를 다자간 합의로 도출했으며, 이는 2013년 발리 각료회의(MC9)에서 무역원활화 합의를 도출한 이후 첫 WTO 다자간 협상 성과임.
- 다만 일부 협상에서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고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만한 내용이 있어, 제네바 패키지도출은 WTO 다자무역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만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 제13차 WTO 각료회의(MC13)가 2023년 12월 이전에 개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향후 우리의 이해관계가 담긴 협상에 대한 선제적 준비가 필요함.

- 제네바 패키지에 따른 후속 논의가 계속될 예정이므로 분야별 잔여 쟁점에 대한 협상 준비가 필요함.
  - MC12 이후 논의될 제네바 패키지 후속 논의 주제 ①코로나19 진단 및 치료제에 대한 후속 지재권 면제 협상 ②수산보조금 미해결 쟁점협상 ③동식물검역 작업 ④분쟁해결제도를 포함한 WTO 개혁 ⑤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 연장 관련 협상 등임.



##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 평가와 정책 시사점

- 해당 논의의 잔여 쟁점은 우리에게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관련 논의 동향 파악 및 우리의 입장을 고려한 균형 잡힌 협상전략을 준비하여 논의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음.
- WTO의 다자 및 복수국간 협상과 지역무역협상을 활용하는 다층적(multi-layered) 접근이 필요함.
  - 통상이슈별 규범 도출에 있어 WTO 다자 및 복수국간 협상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지역 차원에서 논의되는 협상을 다층적으로 활용해야 함.
  - WTO 다자협상의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이슈별 접근 방식에 따른 우리의 이해를 사전분석하여 통상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아브라함 협정 체결 이후 UAE- 이스라엘 경제협력 강화현황 및 시사점

손성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중동팀 전문연구원(shson@kiep.go.kr, 044-414-1266)

이지은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중동팀 전문연구원(jnlee22@kiep.go.kr, 044-414-1096)

- ◎ UAE는 2020년 9월 15일 미국의 중재하에 이스라엘과 외교관계 완전 정상화를 골자로 하는 ‘아브라함 협정(Abraham Accords)’에 서명하였음.
  - 같은 날 ‘중동과 전 세계에서 평화, 안보, 번영의 비전을 추구할 것’을 선포한 해당 협정에 바레인도 서명하였으며, 이후 수단(동년 10월 23일)과 모로코(동년 12월 10일)도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 행렬에 동참하였음.
- ◎ 역내 정치지형 변화와 양국간 경제협력 필요성의 증가는 UAE와 이스라엘 간 관계 정상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오바마 행정부 이래 미국이 중동 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줄이기 시작한 가운데 이란은 핵 능력 고도화, 미사일 개발, 역내 친이란 세력 지원 등을 단행하여 UAE와 이스라엘을 포함한 역내 국가들에 실질적 안보 위협으로 부상하였음.
  - UAE와 이스라엘은 에너지, 첨단기술, 교역 등의 부문에서 상호보완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 협력 시 긍정적인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 ◎ 협정 체결 이후 양국의 교역과 투자, 기업간 및 정부간 교류와 함께 삼각 또는 다자 협력 프로젝트도 늘어나고 있음.
  - 이스라엘과 UAE의 교역은 2021년 10억 2천만 달러로 전년(1억 9천만 달러)대비 5배 이상 늘어났으며, 항공우주, ICT, 보건의료 등에 대한 직접투자도 2020년 7건에서 2021년 9건으로 증가했음.
  - UAE 국부 펀드 및 합작 펀드의 이스라엘 기업 투자, 항공우주, 방산, 스마트 농업 등에 관한 양국 기업간 MOU, 공공부문 차원의 지원 및 기관간 교류도 확대되고 있음.
  - 양국은 인도, 미국 등과 함께 에너지, 기후변화 및 식량안보 등을 중심으로 한 다자협력체제 구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 향후 양국의 경제협력 확대와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 경제관계 개선이 예상되므로 역내 관계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는 UAE와 이스라엘의 보완적 경제관계의 이점을 활용한 새로운 협력전략을 마련해야 함.

## 아브라함 협정 체결 이후 UAE-이스라엘 경제협력 강화현황 및 시사점

- 이스라엘과 UAE의 경제관계는 CEPA 체결을 통해 교역과 첨단산업, 에너지 등과 관련한 투자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이스라엘의 대아랍 협력전략 및 주요 진출부문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GCC 및 이스라엘에 대한 새로운 협력기회 및 예상 경쟁부문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또한 UAE와 이스라엘의 강점을 활용한 삼각 또는 다자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중동 국가간 관계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스타트업 및 수소 공급망 관련 협력사업 등의 추진을 모색할 수 있음.



#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2022. 7) 및 주요 정책 방향 전망

김규판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동아시아팀 선임연구원 (keiokim@kiep.go.kr, 044-414-1017)

김서희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동아시아팀 연구원 (seoheekim@kiep.go.kr, 044-414-1287)

- ◎ 2022년 7월 10일 실시된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 결과, 자민당이 단독 과반의석을 확보함과 동시에 개헌 세력인 자민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이 의석의 2/3를 차지

  - 해당 정당들은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총 93석을 차지하며 전체 248석 중 177석을 확보함으로써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의석수 확보에 성공 - 2021년 10월 실시된 중의원(하원) 선거에서도 개헌 세력은 465석 중 2/3인 352석을 확보
  
- ◎ 2022년 6월 7일 일본정부는 기시다 내각 출범 후 처음으로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제안한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즉 ‘호네부토 방침’을 각의결정

  - 2022년도 호네부토 방침은 ① 일본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일본경제(제1장) ② 새로운 자본주의를 향한 개혁(제2장) ③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제3장) ④ 중장기 경제재정운영(4장)으로 구성
  - [성장·분배] △인재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스타트업 △GX(녹색전환) △DX(디지털전환) 등 다섯 가지 분야를 ‘새로운 자본주의’를 위한 중점 투자분야로 선정하는 한편, 자산소득배증 플랜, 최저임금 확대 등 소득분배정책을 추진
  - [외교 및 안보] 2022년 말까지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개정하여 방위비 총액 목표를 제시하고, 일본의 안보정책 및 방위능력에 대한 중장기 관점을 정의한 ‘방위계획대강’도 개정한다는 방침
  - [사회보장] 급부와 부담의 균형을 확보하면서 모든 세대가 안심할 수 있는 ‘전 세대형 사회보장’ 정책을 추진
  
- ◎ [시사점] 이번 ‘호네부토 방침’은 아베노믹스를 거의 계승하고 있으나, 아베 전 총리의 사망으로 헌법 개정 등을 둘러싼 기시다 총리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

  - 기시다 내각은 아베노믹스를 계승하되 자산소득배증 플랜,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추진하는 등 독자적 ‘색깔’을 추구
  - 아베 전 총리의 사망으로 자민당 내 강경 보수파의 구심점이 사라진 상황에서 기시다 총리의 리더십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며, 헌법 개정 및 방위비 증액 등 아베 정권의 정책을 어느 정도 실현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



## 유럽의 에너지 안보 강화에 따른 대아프리카 협력 확대 가능성 및 시사점

한선이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중동팀 부연구위원 (seonihan@kiep.go.kr, 044-414-1345)

김예진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중동팀 전문연구원 (kimyj@kiep.go.kr, 044-414-1116)

- ◎ 전 세계적인 에너지 시장 지형 변화 및 에너지를 둘러싼 EU-러시아 간 갈등으로 유럽 내 에너지 수급이 비상 상황이며, 이에 유럽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망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구조적인 에너지 수급 불균형 상황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여파가 더해져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폭된바, 에너지 안보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새로운 에너지 자원 질서로의 전환이 더욱 강조될 전망이다.
  - 재생에너지 확대정책과 화석에너지에 대한 높은 해외 의존도가 결합하여 에너지 위기가 발생함.
  - 유럽은 에너지 비상사태에 대한 단기적 대응으로 △ 에너지 절약 △ 화석에너지 재가동 방침을 세우고, 장기적으로는 △ 해외 에너지 의존도 감축 및 공급원 다변화 △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통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있음.
- ◎ 유럽은 에너지 안보를 강조하면서 단기적으로는 러시아산 에너지를 대체하는 에너지 공급원으로, 장기적으로는 그린 전환 목표 달성의 파트너로 대아프리카 협력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됨.
  - 아프리카는 유럽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가스 공급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에너지 개발 잠재력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러시아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음.
  - 유럽은 아프리카 내 천연가스 개발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그린 전환 가속화에 따라 그린 광물 자원, 재생에너지 및 수소 분야에서 아프리카와 협력을 확대할 것으로 보임.
  - 유럽에서 천연가스와 원자력이 한시적으로 그린에너지로 인정받으면서 그린 전환 관련 투자의 향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유럽과 아프리카 간 에너지 분야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자원 수급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그린 전환 과정의 과도기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에너지 안보전략을 수립해야 함.
  - 자원 수급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공급망 다변화와 안정적인 공급처 확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한국의 탄소집약적 산업구조를 고려하여 그린 전환정책 구상 시 과도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비용과 기술 확보가 가능한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함.



## 유럽의 에너지 안보 강화에 따른 대아프리카 협력 확대 가능성 및 시사점

- 다자 무대에서 에너지 안보와 관련된 논의를 주도하면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천연가스, 청정수소, 그린 광물에 대한 공급망 확보 및 다변화를 위해 대아프리카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유라시아 역내 국제남북운송회랑 (INSTC)의 개통 의미와 전망

정동연 세계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dyjeong@kiep.go.kr, 044-414-1167)

- ◎ 국제남북운송회랑(INSTC: International North-South Transport Corridor)은 러시아, 이란, 인도 등 회원국간 운송협력 촉진을 목표로 설립된 복합 운송망으로, 최근 지역 내 핵심 물류망으로서 그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음.

  - INSTC는 러시아에서 인도까지 연결된 3개의 운송회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기존 물류망 불안과 경제제재 속에서 새로운 교역로 및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던 러시아의 전략적 필요에 따라 최근 관심이 집중됨.
- ◎ 2022년 6~7월, 인도와 러시아의 운송기업이 INSTC 카스피해 종단회랑 및 동부회랑에 대한 시험운송을 완료하고 운송서비스를 시작했으며, 회원국은 INSTC를 통해 운송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관련국간 교역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함.

  - 이란 국영해운회사 IRISL(Islamic Republic of Iran Shipping Line)이 카스피해 종단회랑을 이용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뭄바이까지 컨테이너 운송을 완료했으며, 러시아 철도공사(RZhD Logistika)는 동부회랑을 통한 컨테이너 운송서비스를 출시함.
  - INSTC는 수에즈 운하 대비 운송 거리 및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코로나19 팬데믹 과정에서 해상 운임이 크게 상승한 점을 고려할 때 비용 측면에서도 장점을 보유함.
  - 최근 러시아와 인도 간 에너지 및 원자재 교역이 증가하는 가운데 INSTC 활성화를 통해 경제협력의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지역 내 물류 인프라와 제도 개선이 촉진되면서 INSTC 회원국간 교역이 전반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예상됨.
- ◎ 러시아 및 관련국은 회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프라 확충 및 제도적 기반 마련에 집중하고 있으며, INSTC 활성화를 통해 카스피해 연안 및 이란 등지의 '물류 중심지'로서 성장 가능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 러시아는 INSTC 건설에 15억 달러를 투자해 미완성 철도 구간 등에 대한 공사를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며, 관련국과 교통 협력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음.
  - INSTC는 유라시아 대륙을 동서로 연결하는 기존 물류회랑과 연계하여 확장될 가능성이 크며, 대륙 횡단회랑과 종단회랑이 교차하는 카스피해 연안국 및 페르시아만의 항만 인프라를 보유한 이란의 물류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됨.



# 파키스탄 경제 불안 현황과 전망

김경훈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부연구위원 (kimpolecon@kiep.go.kr, 044-414-1263)

남유진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원 (yoojin@kiep.go.kr, 044-414-1330)

## ◎ 최근 파키스탄의 채무불이행(디폴트) 가능성이 제기됨.

- 파키스탄 경제가 △ 세수 부족과 보조금 부담 △ 생필품에 대한 높은 수입의존도 △ 제한적인 외환보유액 등의 문제에 직면한 가운데, 외부환경이 악화되자 파키스탄 금융시장의 불안이 고조됨.
- 2022년 6~7월 주요 국제신용평가사들은 파키스탄의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함.

## ◎ 상호 연결된 세 가지 요인이 파키스탄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킴.

- IMF(국제통화기금)와 파키스탄 정부의 협상 과정이 장기화되면서 '구제금융 지급 시기'가 지연되고 있음.
- △ 물가 부담 확대 △ 기준금리 인상 △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심화되고 있음.
- 집권여당에 대한 지지가 약화되는 가운데 야당이 조기 총선을 요구하며 '정정 불안'이 고조되고 있음.

## ◎ 2022년 하반기에 파키스탄이 디폴트 위기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나, 향후 디폴트 가능성이 반복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정부가 일대일로의 핵심 국가인 파키스탄에 채무 연장을 약속하고 파키스탄 정부가 IMF에 강력한 경제개혁안을 제시하면서 최근 IMF가 파키스탄에 구제금융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아짐.
- 그러나 사회적 불만 → 정정 불안 → 경제개혁 둔화 → IMF의 구제금융 재협상의 악순환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

## ◎ 한국정부는 파키스탄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수혜국 수요에 적합한 분야를 중심으로 원조를 제공하고, 국제사회의 개발도상국 채무위기 해결방안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기업은 파키스탄의 디폴트 관련 리스크를 반영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파키스탄 경제 불안 현황과 전망

- 한국정부는 파키스탄에 식량안보, 홍수, 기후변화 관련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G20의 채무조정공동체계 추진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 한국기업은 파키스탄의 디폴트가 현지 공급망, 금융시장, 소비시장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한·중 수교 30주년: 경제협력 성과 및 과제

**현상백**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통상팀장 (sbhyun@kiep.go.kr, 044-414-1284)  
**양평섭**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지역전략팀 선임연구위원 (psyang@kiep.go.kr, 044-414-1121)  
**정지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지역전략팀장 (jhjung@kiep.go.kr, 044-414-1280)  
**문지영**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통상팀 부연구위원 (morganmoon@kiep.go.kr, 044-414-1189)

◎ [개요] 한·중 수교 이후 지난 30년간 한·중 관계는 빠르게 발전하여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했고, 양국의 경제협력 규모와 범위도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2대 투자대상국으로, 한국은 중국의 3대 교역국으로 부상함(2021년 기준).

- 한·중 양국의 경제협력은 △초기 협력기(1992~2000년) △성장기(2001~14년) △성숙과 전환기(2015년~현재) 등 3단계 발전 단계를 거쳐 발전해 왔으며, 각 단계에서 조정의 과정을 거침.
- 세계화 흐름 속에 한·중 경제협력은 비교우위에 기반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긴밀한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한·중 간 생산 네트워크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
- 중국의 발전전략 전환, 미·중 전략 경쟁의 장기화, 중국 산업 고도화에 따른 한·중 분업구조의 변화 등 한·중 경제협력을 위협하는 리스크가 급증하고 있어 한·중 경제협력 패러다임에 전환이 필요함.

◎ [성과 및 과제] 한·중 경제협력은 긴밀한 생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무역과 투자가 선순환을 이루고 금융·통화 등 협력 범위가 확대되어 양적·질적으로 모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나, 중국 제조업의 고도화, 미·중 전략 경쟁 심화 등 대내외 환경 변화와 새로운 도전 요인으로 인해 기존의 협력 모델은 한계에 직면함.

- [무역] 상호 보완적 분업구조를 통해 빠르게 발전했던 한·중 무역은 중국의 경쟁력 강화 및 기술자립 전략에 따라 경쟁적 협력관계로 변화하였으며,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공급망 충격이 현실화되고 미·중 경쟁이 장기화되면서 상호 공급망 의존도의 비대칭성 심화, 반도체 등 중간재에 대한 과도한 편중 등이 중요 과제로 부상함.
- [투자]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중국 내 투자 환경 및 정책 변화에 따라 투자 붐과 조정기를 거치다가 최근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 대형화의 특징을 보이면서 2021년 역대 최고치인 66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매출 및 영업이익률이 하락하면서 투자 단위당 수출입 유발 효과가 저하되는 등 기존 협력 모델이 한계에 이름.

**한·중 수교 30주년: 경제협력 성과 및 과제**

- [금융] 한·중 금융협력은 무역·투자 확대에 따라 은행업을 중심으로 진출하다가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개설, 통화 스와프, AIIB 설립 참여 등 금융 당국간 협력으로 확대되었고, 최근 중국 금융시장 개방에 따라 보험, 증권 등 진출과 자본시장 협력 범위가 확대되었지만, 중국 진출 금융기관의 수익 양극화, 원/위안화 무역결제의 낮은 활용률 등의 과제에 직면함.

◎ [시사점] 미래 한·중 경제협력은 지난 30년간의 구조적 변화와 과제를 극복하면서 고도화하고 신모멘텀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글로벌 지정학·지경학적 리스크에 대한 대비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중 경험은 △민간 주도의 경제협력 활성화 △종합적인 양자 경제협력 플랫폼 구축 △지역·다자 체제에서의 개방·포용주의 견지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되, 지정학·지경학적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한·중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함.

- 분야별 협력방안으로는 [무역] 상호 공급망 안정화 협력 강화 및 채널 구축, 무역구조의 질적 제고, 한·중 FTA를 포괄적 협력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 [투자] 신산업·서비스업 등 대중 투자 신모멘텀 창출, M&A 등 투자방식의 다각화, 중국자본 활용; [금융] 디지털·녹색 금융의 실험력 모색, 원/위안화 통화·금융 협력 확대 등을 제시함



# 북한의 코로나19 통제 현황과 전망

**한하린** 경제안보전략실 통일국제협력팀 전문연구원 (hlhan@kiep.go.kr, 044-414-1126)

**이대은** 경제안보전략실 통일국제협력팀 연구원 (delee@kiep.go.kr, 044-414-1055)

- ◎ 북한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처음으로 인정('22. 5. 12)한 이후 현재('22. 8. 18 기준)까지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함.

  - 북한 당국은 감염병 확산을 성공적으로 억제했다고 발표하면서 국정 운영을 정상화하고 있지만, 당국이 공개한 통계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이를 발표한 배경에 대해 주의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음.
- ◎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발생을 공식적으로 시인한 직후 북한은 중국의 방역정책을 답습하여 강력한 지역 봉쇄정책으로 대응하였으나, 봉쇄정책이 장기화되면서 이에 따른 피해가 확대되었음.

  - 봉쇄정책이 장기화되자 일부 농민이 농번기를 놓쳤고, 수인성 전염병 확산까지 더해지면서 식량 생산을 위한 노동력 동원이 어려워짐에 따라 식량난과 경제 운용의 애로가 예상됨.
- ◎ 2022년 7월 하순부터 신규 발열 환자가 보고되지 않으면서 코로나19 확산 통제에 자신감을 갖게 된 북한은 국정 운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됨.

  - 8월 10일 개최된 전국 비상방역총화 회의에서 북한은 새로운 방역정책 방향을 정함.
  -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할 수 있는 방역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한 북한은 앞으로도 독자적인 행보를 펼칠 가능성이 큼.
- ◎ 코로나19 확산을 성공적으로 통제했다고 보는 북한 당국은 앞으로 ① 남북, 북중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방역 태세를 유지하고 ② 경제 정상화를 시도하며 ③ 중국과 러시아에 편향된 대외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됨.

  - 북한 내 오미크론 변이 1차 유행이 종식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북한이 발표한 공식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도가 검증되지 않은 만큼 향후 바이러스 확산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 장기화된 고강도 방역정책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경제 정상화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됨.
  -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일체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의 대외관계가 중국과 러시아에 편중된 상태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태평양 도서국을 둘러싼 주요국의 전략경쟁 동향과 시사점

박나연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nypark@kiep.go.kr, 044-414-1245)

김영선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youngsun@kiep.go.kr, 044-414-1272)

- ◎ 최근 미국이 AUKUS, IPEF, PBP 출범 등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경제·안보 동맹을 강화하고 있고, 중국은 태평양 도서국(이하 ‘태도국’)과의 협력 확대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등 태도국을 둘러싼 주요국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 ◎ 중국은 지난 40여 년간 지정학·외교·경제적 측면에서 태도국을 전략적 협력 대상으로 인식하고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왔으며, 다방면에 걸쳐 협력을 강화해오고 있음.
  - 중국은 태도국과 남남협력을 강화하면서 대외원조를 통한 공동 발전과 번영을 강조해왔으며, 안보 분야를 포함하여 인프라 구축, 재난재해 및 기후변화로 인한 생존 위기 극복, 기초적인 의료 서비스 보급 확대, 농어업 경쟁력 강화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확대해오고 있음.
- ◎ 미국, 호주, 일본은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의식해 최근 태도국에 대한 ODA 확대, 소다자간 협력 이니셔티브 출범 등을 잇달아 발표하는 등 태도국과의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경제·외교·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태도국과의 긴밀한 외교관계를 재구축하고자 재정 지원 확대 약속과 더불어 미국 대사관 추가 설립, 안보협력 강화, 인적 교류 확대,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발표함.
  - 호주는 최근 3년간 차관 중심의 인프라 지원 사업을 확대해오고 있으며, 알바니즈 신임 총리 역시 ODA 증대 등을 통한 협력관계 증진을 강조하고, 취임 직후부터 신임 외교장관을 태도국에 파견하고 직접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등 태도국과의 외교관계 재건을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음.
  - 일본은 태도국에 대한 ODA 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온 가운데 미국과 공동으로 호주의 AIFFP에 참여하였으며, 태도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다자간 협력 이니셔티브에 동참함.
- ◎ 이러한 주요국의 전략경쟁 속에서 태도국은 전반적으로 ‘합의 기반’의 의사결정 원칙과 전통적 우방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균형적 외교를 추구하는 것으로 관측되며, 경제발전, 기후변화, 불법어업 근절 등 도서국으로서의 존속이 달린 사안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주변국과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 태평양 도서국을 둘러싼 주요국의 전략경쟁 동향과 시사점

- ◎ 태도국을 둘러싼 주요국의 전략경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정부는 태도국과의 외교적 기반 확대를 위해 △독자적인 중장기적 협력전략 수립 △대화 채널 체계화 및 정례화 △ODA를 활용한 소다자협력 참여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우리 정부는 태도국에 대한 독자적인 중장기적 협력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정상급회담 정례화 △PIF 참석 △대사관 추가 설치 등을 통한 대화 채널 유지·강화가 필요함.
  - 또한 태도국을 둘러싼 다양한 협력 이니셔티브가 추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미국·호주 등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태도국의 당면 과제인 인프라 구축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질적 협력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음.



## 최근 유럽 이주민 유입 동향 및 정책 시사점

**장영욱**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장 (yojang@kiep.go.kr, 044-414-1221)

**정민지**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중동팀 전문연구원 (mijeong@kiep.go.kr, 044-414-1225)

- ◎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난, 기후변화, 식량위기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유럽 내 이주민 유입 압력이 높아지고 있음.
  - 전쟁 발발 후 6개월간 약 720만 명의 우크라이나인이 유럽 국가로 유입됨.
  - 팬데믹, 전쟁, 이상기후현상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경제난은 아프리카, 남아시아 등 저소득지역으로부터 유럽 등 고소득지역으로의 이주민·난민 유입을 가속화시킴.
  - 코로나19로 인한 국경통제 여파로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던 정규·비정규 이주 및 난민 신청은 2021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임.
- ◎ 유럽연합은 이주민·난민 유입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 수단을 마련함.
  - 유럽연합은 ‘이주와 이동에 대한 포괄적 접근(2005년)’, ‘유럽이민의제(2015년)’, ‘이주 및 난민에 관한신탁정(2020년)’ 등을 거치며 국경통제 및 난민 관리체계를 발전시켜옴.
  - 주요 이민 송출국인 아프리카 주요국과는 ‘이동성 파트너십’, ‘라바트 프로세스’, ‘카르툼 프로세스’ 등 양자 및 다자간 협의를 통해 불법 국경통과를 줄이는 한편, 이민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자 노력함.
  - 최근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에는 비교적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며, ‘임시보호제도’를 통해 우크라이나 출신 이주민에게 주거, 노동, 의료, 교육, 이동 등의 권리를 제공하고 있음.
- ◎ 유럽 내 이주민 유입 사례 연구를 통해 이주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파악하고 정책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이주민 유입은 유럽 수용국의 노동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전체 고용을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단기적으로 실업률 증가, 주택가격 상승, 재정지출 부담 증가 등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
  - 차별, 사회갈등, 분쟁, 국경지역 무력충돌 등 사회적인 영향을 발생시킬 가능성도 존재함.
  - 이민의 부정적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민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며, 이주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송출국과 수용국 공동의 노력이 요구됨.
  - 또한 가까운 미래에 한국에 대한 이주민 유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대중국 AI 반도체 수출규제 영향과 시사점

김혁중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부연구위원 (hjkim@kiep.go.kr, 044-414-1166)

- ◎ 미국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중국 AI 반도체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행함(8월 26일).
  - 미국 행정부는 AI 기술개발에 활용도가 높은 고성능 그래픽카드인 엔비디아의 A100, H100 과 AMD의 MI250에 대한 수출허가제를 실시함.
  - 이번 정책은 단기적으로 중국의 AI 기술개발에 차질을 줄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대체품을 활용하거나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방식 등으로 규제를 우회할 수 있어 중국의 AI 기술개발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전망이다.
- ◎ 미국이 중국의 AI 기술개발을 보다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추가적인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
  - 미국이 추가할 수 있는 독자적인 규제로는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 ① 독점적인 라이선스 하의 프레임워크나 ② 중국의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차단, 하드웨어적으로 ③ 고성능 CPU, FPGA 및 ASICs 등에 대한 수출허가제 실시 등으로 확대될 수 있지만, 동 수단은 미국 내 반도체 산업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파트너국과의 협조를 통해 추가적인 규제를 마련할 가능성이 있음.
  - 반면 파트너국을 통한 규제는 ④ 한국과 대만의 협조를 통해 초미세공정을 이용한 제품이나 ⑤ 고대역 메모리 수출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제품 개발 동력을 저하시키는 한편 제품 수요 감소의 요인이 될 수 있음.
- ◎ 향후 미국이 파트너국인 한국에 협조를 요청할 경우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유도해야 하며, 별도로 중국의 AI 반도체 국산화 노력에 따른 기술 격차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 대중국 규제에 동참할 경우 메모리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 모두 광범위한 제품의 특성보다는 세부 품목을 대상으로 규제를 한정 짓는 것이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목표에 부합함.
  - 중국의 AI 반도체 자급화 노력에 대응하여 한국은 기술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고급 인력 유출을 방지하는 한편, 공정 미세화, 차세대 반도체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인도 농산물 수출 증가의 대내외 요인과 시사점

김도연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dykim@kiep.go.kr, 044-414-1257)

- ◎ 인도의 농산물 수출은 2019/20년을 기점으로 지속 증가해 2021/22년 전년동기대비 17.7% 증가한 406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코로나19로 대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인도의 농산물 수출은 2019/20~2021/22년 기간 연평균 21% 성장하였음.
- ◎ 특히 밀과 쌀, 설탕의 수출이 대폭 증가했는데, 2021/22년 인도 곡물 수출은 129억 달러 규모로 전년동기대비 93% 증가했으며, 당류 수출은 51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32% 증가함.

  - 같은 해 기준 인도가 농산물 수출을 가장 많이 한 국가는 방글라데시로, 수출액은 2019/20년 대비 464% 증가한 39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 인도 농산물 수출이 증가한 주요 요인은 다른 주요 농산물 수출국의 생산량 감소 및 수출제한 조치로 국제 가격이 상승하자 재고량이 풍부하고 가격이 저렴한 인도 농산물에 대한 대외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임.

  - 세계 다른 주요 농산물 수출국의 생산량이 가뭄, 홍수 등 기상 이변으로 감소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대란으로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져 일부 국가의 경우 수출제한 조치를 시행해 교역량이 감소하였음.
  - 반면 인도는 작황 상황이 양호했으며, 2018년에 농산물 수출을 특화한 정책(AEP)을 발표하고 △수출 클러스터 조성 △신제품 개발 등을 추진한 것 또한 농산물 수출이 증가한 요인으로 분석됨.
- ◎ 향후 인도정부는 자국 농산물의 품목을 다양화하고 수출 저변을 확대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주요 농산물의 수급이 불안정해질 경우 자국 식량안보를 강조하며 즉각적인 수출 금지 혹은 제한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이 있음.

  - 인도정부는 2022년 5월에는 밀 수출을 금지했으며, 8월에는 밀가루 수출을 금지하였음.
- ◎ 이에 우리나라의 식량 수입처를 다변화하기 위해 인도와의 농산물 교역을 확대할 경우, 주요 작물에 대한 인도정부의 관리 및 수출 환경을 고려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인도 농산물 수출 증가의 대내외 요인과 시사점

- 우리 정부는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위하여 자급률 제고와 해외 수입선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도로부터 당밀, 옥수수, 참깨 등 수입품목이 증가하는 추세임.
- 우리나라의 발전된 농업기술을 인도의 풍부한 인적자원과 자연환경에 접목시킨 현지 맞춤형 농업 협력을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인도에 한-인도 식품산업 단지를 조성해 장기적인 식량 공급처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음.
  - 식량 수입 의존도가 높은 UAE는 인도 내 식품산업 단지 조성에 20억 달러를 투자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식량 수급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음.



## 2022년 케냐 대선 이후 신정부 정책 방향 및 시사점

정민지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중동팀 전문연구원 (mjjeong@kiep.go.kr, 044-414-1225)

- ◎ 케냐 대선이 2022년 8월 실시되었으며, 법적 공방 끝에 9월 대법원이 최종 확정된 결과에 따르면 윌리엄 루토 전(前) 부통령이 라일라 오딩가 전 총리에 50.5% 대 48.9%의 근소한 차이로 승리함.
  - 케냐 최대 종족인 키쿠유족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오지 않았고, 키쿠유족인 우후루 케냐타 전 대통령이 자신의 부통령인 루토 후보가 아닌, 수년간 정적관계에 있던 오딩가 후보를 지지하면서 케냐 역사상 가장 치열한 선거가 치러짐.
  - 루토 진영은 유력 정치가문 출신인 오딩가, 케냐타와 대비되도록 루토 후보의 서민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서민의 생활고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하여 선거에서 승리함.
- ◎ 9월 취임한 루토 대통령은 ‘상향식 경제’를 표방하며, △농업 △중소기업 경제 △주거 △보건의료 △초고속 디지털 통신망 및 콘텐츠 산업을 5대 축으로 하는 서민 친화적 정책을 제시함.
  - [경제]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해 식품물가 안정 및 농가소득 확대를 추진하고, 중소기업 지원 및 경공업 육성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한편, 이전 정부에서 문제되었던 정부부채를 축소하는 데 주력할 계획임.
  - [복지] 신규주택 보급 확대, 건강보험기금 개혁, 일차보건의료 개선, 의료서비스 이용비용 인하 등을 통해 국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며, 의약품 및 의료용품 제조를 활성화하고자 함.
  - [외교] 친서구적 정책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선거과정에서 루토 대통령이 반중(反中) 발언을 하기도 하였으나 중국으로부터의 신규차관 도입을 자제할 뿐 중국과의 외교관계가 경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 루토 정부의 경제정책은 단기적으로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지만, 물가 안정과 재정건전성 확보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예상되며, 한국은 IT, 농업, 콘텐츠 산업, 통상 부문에서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2022년 케냐 대선 이후 신정부 정책 방향 및 시사점

- 정부의 소득·고용 확대조치는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동시에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고, 농업생산성 향상이 식품 물가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분간 물가는 높게 유지될 전망이며, 고물가가 지속되면 중장기적으로 경기가 둔화될 수 있음.
- 루토 정부가 제시한 서민 지원책들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정부지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공약을 이행하면서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한국은 루토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서비스 온라인화, 쌀을 비롯한 농산물 자급 능력 향상, 문화 콘텐츠 창작환경 개선 및 역량 강화, 양자 무역 측면에서 협력 기회가 많을 것으로 기대됨.



## 부탄의 대인도·중국 균형전략과 시사점

김경훈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부연구위원 (kimpolecon@kiep.go.kr, 044-414-1263)

### ◎ 전통적으로 경제적·외교적 관계가 긴밀한 인도와 부탄은 중국과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음.

- 인도가 서방국가와 관계를 강화하고 남아시아 내 영향력을 회복하려는 과정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불안정해지고 있으며, 히말라야산맥의 동부, 중부, 서부에서는 인도와 중국 간 영토 분쟁이 일어나고 있음.
- 인도는 히말라야산맥 중부에 위치한 부탄을 ‘지정학적 요충지이자 완충지대’로 인식하고 있으며, 인도는 수출입, 투자, 원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탄의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음.
- 2017년 부탄·인도·중국의 접경지역에서 인도군과 중국군이 대치하였으며, 이후 인도에서 멀지 않은 부탄·중국 간 영토분쟁 지역에서 중국군의 도로 및 마을 건설활동이 포착되고 있음.

### ◎ 부탄 정부는 경제 및 안보 안정화를 위해 대인도·중국 균형전략을 고려하고 있으며, 인도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부탄에 대한 개발지원 및 경제교류를 확대하고 있음.

- 부탄에서는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 중국과의 경제협력 △ 영토분쟁 문제 해결 △ 경제 파트너 다변화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음.
- 인도정부는 부탄과 중국의 관계 회복 가능성을 견제하면서 교육, 보건, 수력발전,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탄에 대한 개발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 한국정부는 부탄과 인접국 간의 외교관계 및 히말라야 부근 인도·중국 간 분쟁 가능성을 점검하고, 부탄에 대한 지원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인도·중국 간 갈등 심화는 글로벌 가치사슬, 다자간 협력, 지역안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인도와 중국의 관계가 악화될 경우 부탄은 한국과 같이 지리정치적으로 관련이 적은 국가와의 경제 및 개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음.
- 최근 한국의 대부탄 원조가 교육 분야에 집중된 가운데 한국정부는 향후 개발수요가 큰 에너지 및 교통 인프라 분야와 산림관리에 대한 지원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중국 20차 당대회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허재철**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지역전략팀 부연구위원 (jcheo@kiep.go.kr, 044-414-1042)  
**문지영**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통상팀 부연구위원 (morganmoon@kiep.go.kr, 044-414-1189)  
**박진희**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지역전략팀 전문연구원 (jhpak@kiep.go.kr, 044-414-1285)  
**이한나**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지역전략팀 전문연구원 (leehn@kiep.go.kr, 044-414-1288)

- ◎ [당대회 업무보고] 2022년 10월 16일(일)부터 22일(토)까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된 20차 당대회에서 업무보고가 채택됨에 따라 향후 중국의 국정운영 방향이 윤곽을 드러냄.
  - 당대회에서 통과된 업무보고의 핵심은 △중국이 달성해야 할 두 번째 백 년의 목표를 ‘사회주의 현대화강국 건설’이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발전’과 ‘안전’이라는 두 개의 기둥이 밀받침되어야 하며 △지금 이 목표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에서 있는 만큼 무엇보다 내부 ‘단결’과 ‘분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중국이 추구해야 할 현대화란 ‘중국식 현대화’이고, 현대화 강국의 분야로 제조·품질·우주·교통·인터넷·디지털·농업·무역 강국 등을 제시했으며, 이러한 현대화 강국 건설을 위해서 고품질(高质量) 발전과 신발전구도(新发展格局) 구축을 통해 ‘발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강조함.
- ◎ [지도부 인선] 당대회에 이어 개최된 중국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20기 1중전회)를 통해서진핑 측근으로 지도부가 구성되며 시진핑 3기가 공식 출범함.
  - 올해 69세인 시진핑이 총서기로 다시 선출되면서 ‘7상8하’의 인사 관례는 깨졌고, 새로 선출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전원이 시진핑 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사실상 중국정치의 집단지도 체제는 무너지고 ‘집중통일영도(集中统一领导)’ 체제로 전환됨.
  - 시진핑 3기의 중앙정치국 위원 및 상무위원 중에서 57세 이하인 인물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등 시진핑의 후계구도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임.
- ◎ [전망 및 시사점] 이른바 ‘중국식 현대화’를 통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 및 리스크에 대해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위해 제시한 ‘강국전략’에 따라 향후 중국이 자국기업 육성 위주의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은 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환경 변화에 맞춘 중국시장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국 20차 당대회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또한 중국식 현대화의 요건인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분배제도 개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재산 축적 과정에 대한 관리 강화, 중산층 육성 등의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함.
- 한편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의 기반이라고 인식하며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가능한 범위에서 한·중 간 공동으로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양국의 경제협력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함.
- 중국이 대만 문제와 관련하여 최대한 평화 통일을 추구한다고 했지만 무력 사용의 가능성을 언급했고, 2049년이라는 통일 시간표가 간접적으로 제시된 만큼 향후 대만해협의 긴장 국면은 지속 또는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큰바, 우리는 대만해협 유사시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023년 세계경제 전망

총괄책임 안성배 국제거시금융실장 (sungbae@kiep.go.kr, 044-414-1190)

## ◎ 2023년 세계경제는 2022년보다 0.7%p 낮은 2.4%(PPP 환율 기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긴축과 파편화 속에 경기회복이 억눌린 가운데 △금리 급상승과 민간 부채 부담의 실물 전이 △재정역할의 딜레마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미중 전략경쟁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세계경제 성장의 추가적인 하방 요인으로 작용

## ◎ 미국과 유로,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매우 낮은 성장세를 보일 전망

- 미국은 2023년 0.6%의 매우 저조한 경제성장률을 나타낼 전망이며, 물가와 금리 부담에 따른 민간경제활동 위축, 중간선거 이후 정치적 과정에 따른 정책의 제약이 판단의 근거- 유로 지역은 0.0%, 영국은 -0.2%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물가상승에 따른 구매력 약화와 공급망차질 및 투입비용 증가 등이 경기 하방 요인이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의 긴 여파에 시달릴 것  
- 일본은 1.5%의 낮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수출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계저축과 기업수익에 기초한 내수 중심의 플러스 성장 전망

## ◎ 주요 신흥국들의 전망치도 대외환경 악화로 지난 2022년 5월 전망 대비 하향

- 중국은 2023년 연간 4.8%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판단함. 코로나19 확산세 진정과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및 금융 지원책 등은 긍정적인 요인이나,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중국 부동산 경기 둔화 등 리스크 요인에 주목  
- 인도는 5.6%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함. 외국인직접투자의 호조세가 지속될 것이나, 코로나19의 기저효과가 사라지고 높은 인플레이션과 주요국의 통화긴축, 지정학적 불안정 등이 하방 요인  
- 러시아는 -2.5%의 역성장을 나타낼 전망이다. 전쟁의 장기화와 광범위한 제재로 민간 부문의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은 2023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  
- 브라질은 2023년에 2022년의 2.7%보다 낮은 0.6%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은 긍정적인 요인이나, 재정적자 누적과 금리 인상으로 인한 투자 및 소비 위축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



## 미국 중간선거의 정치·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강구상**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장 (gskang@kiep.go.kr, 044-414-1099)  
**김혁중**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부연구위원 (hjkim@kiep.go.kr, 044-414-1166)  
**김중혁**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전문연구원 (jhkim@kiep.go.kr, 044-414-4324)  
**권혁주**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전문연구원 (hjkwon@kiep.go.kr, 044-414-1086)

- ◎ 2022년 11월 8일(현지 시각)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4년 만에 공화당이 하원을 탈환하고,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였음.
  - 현재 기준(2022년 11월 17일)으로 공화당은 지난 2018년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 지위를 잃은 이후 4년 만에 다시 하원을 장악하였으나 상원의 경우 민주당이 50석을 확보함으로써 다수당을 차지하였음.
- ◎ 이번 중간선거를 통해 새롭게 구성된 제118대 의회의 주요 정책과제로는 △중국 대응 경제안보 △인플레이션 감축법 △기후·에너지 정책 △임신중지권 △이민 및 국경 문제 △양육비 지원 확대 △주거 및 도시개발 등을 꼽을 수 있음.
  -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정부에 이어 강력한 대중국 견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 기조는 제117대 의회에서 통과된 「미국혁신경쟁법(USICA)」과 「미국경쟁법(ACA)」을 통해 초당적으로 뒷받침되었다는 점에서 제118대 의회에서도 상기 두 법안이 조율을 거쳐 하나의 대중국 견제 법안으로 추진될 수 있음.
  -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제117대 의회에서 통과되었는데,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에 의해 일부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은 있으나 전반적인 기조는 유지될 전망- 그 외에도 기후변화 대응, 임신중지권 허용, 친이민 정책, 양육비 지원 확대 등에 반대하는 공화당의 기조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 임기 후반부에 해당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전망
- ◎ 한편 미국 의회 구성이 행정부의 정책 추진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발의 정당 총성도 △발의정당 의석 점유율 △대통령 국정 지지율 등은 법안 통과확률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데 반해, 중간선거 이후에는 법안 통과확률이 낮아지는 경향성이 확인됨.
  - 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이번 중간선거를 통해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함으로써 민주당에서 발의하게 될 법안의 통과확률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임기 후반부 정책 추진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미국 중간선거의 정치·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 ◎ 상기 분석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전망 및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함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진하는 기후·이민·교육·사회복지 관련 정책 추진이 어려워질 전망
- 공화당은 하원 다수당 지위를 활용하여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으나,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산업경쟁력 강화 또는 대중국 의존도 축소 등과 같은 초당적 의제에서는 민주당과 협력할 여지 존재
- 양당 간 의제 및 이념 갈등 심화로 인해 초당적 과제인 인프라·산업경쟁력 강화·대중국 견제 등과 같은 분야로 의회 내 논의가 집중될 수 있음.
- 의회를 통한 정책 추진력이 약화됨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후반부의 주요 정책 추진 수단으로서 행정명령과 같이 의회를 우회하는 독립적인 수단을 활용할 가능성 존재- 민주당은 상원 다수당 지위와 공화당과의 근소한 하원 의석 수 차이를 바탕으로 정책 추진 동력을 어느 정도 확보할 전망
- 미국 의회 내 법안 추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양당에서 발의하는 정책 의제를 파악하는 한편,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법안의 경우 사전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이견을 조율할 필요
- 새롭게 구성된 제118대 의회 구성원의 성향을 파악함으로써 한·미 간 정책 협력 방안을 도출할 필요



# 최근 미국의 바이 아메리카 (Buy America) 정책 강화 동향과 시사점

박혜리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전문연구원 (hrpark@kiep.go.kr, 044-414-1029)

- ◎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직후 공약했던 연방조달 부문에서의 바이 아메리카 정책 강화를 위해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는 등 신속한 행보를 보임.
  - [바이 아메리카 전담기관의 신설 및 예외적용(Waivers)의 엄격화] 바이 아메리카 정책을 총괄하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 실(Made in America Office, 이하 'MIAO')을 신설하여 각 조달기관의 바이 아메리카 규정 이행과 예외적용을 관리하도록 함.
    - 예외적용 최소화를 위해 △각 조달기관별 자국산 구매 담당자(Senior Accountable Officials, 이하 'SAO') 지정 △MIAO의 조달기관에 대한 시장 및 제품 분석 지원 △예외적용 관련 절차와 서류의 표준화 △바이 아메리카 정책 활용에 대한 정기적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의무화 등을 실시
  -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자국산 구매 규정 강화] 2022년 5월 14일에 발효된 「인프라법(The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이하 'IIJA')」을 통해 (연방재원)공공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미국산 제품 구매를 의무화하는 「빌드 아메리카, 바이 아메리카 법(The Build America, Buy America Act, 이하 'BABA Act')」이 도입됨.
    - 「BABA Act」는 이전에 비해 △규제 대상 '인프라'의 범위를 확대하고 △건축 자재(Construction Materials)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예외적용의 절차와 요건을 강화함.
  - [연방조달규정(FAR) 개정안 발효] 2022년 10월 25일 발효된 연방조달규정(FAR)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자국산 인정 기준 강화(55% → 60%) △핵심 제품 및 구성품(Critical products and components)에 대한 자국산 가격 우대 계획 △새로운 자국산 검증 방식의 도입임.
- ◎ 미국의 지속적인 바이 아메리카 정책 이행으로 미국 조달시장의 진입장벽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공공 인프라 조달에 대한 규제강화로 건축 자재(비철금속, 플라스틱, 유리, 목재, 폴리머 제품등) 조달시장과 전기차 인프라 조달시장 진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

## 최근 미국의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정책 강화 동향과 시사점

-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과 조달협정(GPA, FTA)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조달협정 미체결국인 중국에 비해 상대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고, 연방재정지원 인프라에 대한 규제강화로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인프라 프로젝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우리 기업에 기회요인임.

- ◎ 정부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바이 아메리카 정책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미 조달시장에 대한 국내기업의 진출 리스크 완화를 위한 정책지원을 제공하고, 향후 미국이 제기할 수 있는 국제 정부조달협정에 대한 재논의(GPA 양허안 수정 및 철회, 한·미 FTA 조달협정 재협상, IPEF조달협력 제안 등)에도 대비해야 함.



## 글로벌 물가상승에 대한 아세안 주요국의 대응과 시사점

**조승진**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부연구위원 (sjcho@kiep.go.kr, 044-414-1248)  
**김남석**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부연구위원 (nskim@kiep.go.kr, 044-414-1080)  
**정재완**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선임연구원 (jwcheong@kiep.go.kr, 044-414-1051)  
**신민금**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mgshin@kiep.go.kr, 044-414-1169)  
**신민이**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mlshin@kiep.go.kr, 044-414-1154)  
**김제국**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jegook@kiep.go.kr, 044-414-1039)

### ◎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추세 속에 아세안 주요국은 교통 및 식음료 부문을 중심으로 물가상승 압력을 받고 있음.

- 아세안 주요국의 최근 국가별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4.3~7.7%를 기록했으며,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국제유가와 세계 식량가격 상승 등 대외적 요인과 인건비 상승의 대내적 요인이 결합하여 아세안 주요국의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있음.

### ◎ 아세안 주요국은 통화긴축, 보조금 지급, TF 구성을 통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고 있음.

- 2021년 10월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아세안 주요국은 통화정책을 긴축기조로 전환했으며, 2022년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연이어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하고 있음.
- 아세안 주요국은 고유가 및 물가상승에 따른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연료보조금과 현금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는 2022년 6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TF를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음.

### ◎ 아세안 주요국의 환율은 미국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억제되었던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추세임.

- 미국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와 경기위축에 대한 우려로 아세안 주요국의 통화 가치는 최근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인상이 제한되었던 최저임금은 저소득층의 물가상승에 따른 생활비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인상되고 있음. - 경기선행지수인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가 2022년 9월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경기 회복세가 불안정한 것으로 평가됨.

## 글로벌 물가상승에 대한 아세안 주요국의 대응과 시사점

- ◎ 아세안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구매력 감소, 임금상승은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에 디지털 통상협력을 포함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개방 수준을 제고하여 아세안과의 경제협력 원동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아세안 현지 진출 한국기업은 환율 변동과 임금상승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이를 경영계획 수립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메이크 인 인디아’ 성과와 시사점

김경훈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부연구위원 (kimpolecon@kiep.go.kr, 044-414-1263)

### ◎ 전 세계적으로 인도가 유망한 생산기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고 있음.

- 지난 수십 년간 인도 내 산업화가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한 상황에서 인도정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2010년대 중반부터 제조업 육성을 골자로 한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산업화의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 프로젝트의 투자 잔액이 최근 대폭 증가하였고, 인도를 매력적인 생산기지로 인식하는 다수의 국내외 제조업체가 대규모 투자계획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음.

### ◎ 다양한 국내외 요인들이 인도 내 제조업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내수시장]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가 줄어들면서 인도에서 기존의 빈곤층 축소 및 중산층 확대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내구재 소비시장이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금융 안정성]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통화 및 금융 정책에 힘입어 인도의 환율, 물가 등 각종 지표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교통 인프라] 제조업 클러스터를 잇는 운송 인프라의 양적 확대에 힘입어 국내외 연결성이 강화되고 있으며, 인도 정부는 디지털화, 중앙통제 강화 등을 통해 인프라의 질적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음.
- [투자 인센티브] 인도 정부는 재정적으로 제조업체를 지원하는 ‘생산연계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해당 정책이 육성하는 신성장산업을 중심으로 인도 대기업들이 사업을 재편하고 있음.
- [국제정치경제] 인도 정부는 중국경제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기 시작한 한편,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및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협상 참여를 통해 선진국 경제와의 접촉면을 넓히고 있음.

### ◎ 우리 정부 및 기업은 신흥 제조기지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에서 사업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메이크 인 인디아’ 성과와 시사점

- 한국기업은 인도를 활용한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점검하고 △인도정부의 다양한 개발목표 이해 △현지기업과의 협력 강화 △현지 지사 내 산업정책 대응조직 마련 △주(州)별 차별화 접근 등을 통해 제조업투자환경 변화의 혜택을 십분 누릴 필요가 있음.
- 운송 인프라, 물류, 유통, 재생에너지, 연구개발, 산업디자인 등 인도의 제조업 육성전략과 연계된 산업에서도 진출 기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한국정부는 교역 확대, 공급망 연계 강화 등을 목표로 인도와의 경제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양국 기업, 싱크 탱크, 산업단체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영국 중기재정정책(2023~28년)의 주요 내용 및 평가

임유진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연구원 (yjlim@kiep.go.kr, 044-414-1064)

- ◎ 리시 수낙 총리가 이끄는 영국정부는 2022년 11월 17일 재정건전화 방안을 담은 2023~28년(회계연도기준) 5년 중기재정정책을 발표함.
  - 지난 9월 23일(현지시간) 영국의 전임 내각이 ‘성장계획(The Growth Plan 2022)’을 발표한 직후 재정부담에 대한 우려로 금융시장의 주요 지표가 일제히 악화되었으며, 이후 정부는 정책을 철회함.
  - 영국 리즈 트러스 전 총리는 정책발표에 따른 정치적·경제적 혼란을 책임지고 취임 45일 만인 지난 10월20일 사임하였으며, 동월 25일 리시 수낙 신임총리가 취임하여 새 재정정책을 발표함.
- ◎ 중기재정정책의 주요 골자는 △정부재원 확보 △가계 및 공공서비스 지원 △성장계획임.
  - 정부재원 확보방안으로 증세와 세제혜택 축소 등을 통한 정부수입 확대(248억 파운드)와 정부지출 감축(301억 파운드)을 제시하였으며, 2027년까지 549억 파운드 규모(GDP의 약 2%)의 재정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가계의 구매력 위축을 완화하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 △에너지가격 보장정책 연장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생활비 지원 △건강·사회복지서비스 및 교육 추가예산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함.
  - 중기재정정책에서 영국의 미래 번영을 위해 인력·인프라·혁신을 우선순위로 한 성장계획을 제시함.
- ◎ 영국의 재정건전화 방침은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의 안정화, 중기적으로 영국경제의 국제적인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경기침체 상황에서 정책의 실현 및 지속가능성 확보가 중요함.
  - 정책 발표 이후 지난 9월과 달리 금융시장의 변동폭은 제한적이었으며, 파운드화 가치는 상승하고 국채금리는 하향 안정화됨.
  - 이번 발표로 영국중앙은행과의 거시정책 공조 의지를 표출함으로써 지난 9월의 통화·재정간 상충된 정책결정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함.



## 영국 중기재정정책(2023~28년)의 주요 내용 및 평가

- 다만 정부지출 삭감계획의 경우 대부분이 총선(2025년 1월 이전) 이후인 2025~27년에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실현가능성과 그 효과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전망도 상존함.
- 경기침체·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지속될 경우 세수확보 및 재정지출 축소정책 추진에 난항을 겪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차입비용 증가로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임.



# 주요국의 ESG 성과 평가 실태 및 시사점

박지원 경제안보전략실 글로벌전략팀 부연구위원 (jiwonpark@kiep.go.kr, 044-414-1324)

◎ ESG 경영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기업의 ESG 평가 및 데이터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으나 △평가의 신뢰성 및 투명성 부족 △중소기업 및 비상장 기업 배제 △ESG 평가 및 데이터 제공 기관에 대한 공적 규제 부재라는 문제점이 있음.

-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서 내용 및 형식(표준) 차이로 인해 평가간 상관관계가 낮아지므로 평가의 신뢰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를 중심으로 ESG 공시의 표준화를 강조하고 있음.
- ESG 평가 및 데이터가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으나, 스코프3의 의무공시 포함 및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 증대로 중소기업 및 비상장사의 ESG 성과 및 위기관리를 평가할 필요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 ESG 평가 및 데이터 시장은 대부분 규제범위 밖에 있어 규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2021년 11월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가 권고안을 발표한 이후 인도, EU, 영국, 일본 등에서 규제의 움직임이 있음.

◎ 주요 글로벌 ESG 평가기관의 국내 기업 평가점수를 다른 주요국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기업의 ESG 성과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무디스, 레피니티브, 블룸버그, 서스테이널리틱스, CDP의 ESG 점수와 영역 점수의 평균을 기업의 재무특성 및 산업을 고려하여 16개 주요국과 비교한 결과, 블룸버그 공시점수를 제외하면 국내 기업의 ESG 점수는 17개국 중 14~17위, 영역 점수는 12~17위를 차지하였으며, 지배구조(G) 영역에서 점수가 특히 낮았음.

◎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정부는 ESG 정착 초기 단계임을 고려하여 규제당국 주도의 획일화된 평가보다는 평가기관이 자발적으로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국내 기업의 ESG 성과 및 위기 대응은 아직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으로 성과 관리에 개선의 여지가 많으나, ESG 시장의 성숙과 함께 개선될 것으로 기대함.
- 향후 ESG 평가 관련 국제 논의에서 국내 및 아시아 기업의 이해와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의 노력이 필요함.



# 2022년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최인아**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장 (iachoi@kiep.go.kr, 044-414-1049)  
**이재호**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선임연구원 (jhlee@kiep.go.kr, 044-414-1134)  
**신민금**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mgshin@kiep.go.kr, 044-414-1169)

- ◎ 한국정부는 2022년 11월 11일 캄보디아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새로운 대아세안 정책인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발표함.

  -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 평화, 번영’의 3대 비전과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원칙을 바탕으로 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고, 아세안이 한국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의 핵심 파트너가 될 것임을 표명함.
  - 윤 대통령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아세안 중심성과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을 확고히 지지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아세안 연대 구상’ 발표를 통해 한국의 아세안 중심 협력기조를 이어나갈 것임을 밝힘.
  - 한국은 ‘한-아세안 연대 구상’ 이행을 위해 향후 5년에 걸쳐 아세안 관련 협력기금을 2배 증액할 계획이며, 2024년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한-아세안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것을 공식 제안함.
  
- ◎ 윤석열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 외에도 아세안+3,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등 아세안 관련 다자정상회의에 참석하는 한편, 아세안 3개국(캄보디아·필리핀·태국)과의 양자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 강화 의지를 피력함.

  - 이어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과 함께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양국간 경제협력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디지털, 공급망, 기후변화, 개발협력, 투자와 관련된 정부·민간 MOU 10건을 체결함.
  
-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 지속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던 가운데, 윤 대통령의 이번 동남아 순방은 한국의 아세안 중심 기조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 특히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최초 공개함으로써,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아세안이 핵심 파트너라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하였음.

## 2022년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한-아세안 연대 구상’은 아세안과의 전략·안보 협력 확대와 경제안보 네트워크 강화를 강조 하는데, 이는 한국이 기존의 교역·투자 중심의 협력을 넘어 아세안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함.

◎ 다만 한국의 아세안 중심 협력기조가 아세안 측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아세안 관련 협력기금 증액외에 ‘한-아세안 연대 구상’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조속히 발표할 필요가 있음.

- ‘한-아세안 연대 구상’이 한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하부 정책으로 추진됨을 감안할 때 정상 및 고위급 대화 활성화를 통해 아세안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시해야 함.



## 2022년 네팔 총선 결과와 집권당의 과제

**김도연**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dykim@kiep.go.kr, 044-414-1257)

**남유진**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원 (yoojin@kiep.go.kr, 044-414-1330)

**백중훈**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jhpek@kiep.go.kr, 044-414-1323)

**김경훈**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부연구위원 (kimpolecon@kiep.go.kr, 044-414-1263)

- ◎ 2022년 11월 20일에 실시된 총선에서 현 여당인 네팔 회의당(Nepali Congress)이 최다 의석을 차지하였으나 단독 과반은 확보하지 못해, 재집권을 위한 연정 구성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이번 총선의 핵심 이슈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충격 및 높은 물가 등의 경제 문제’와 ‘인도, 중국, 미국과의 외교관계’였음.
  - 네팔 회의당이 기존의 동맹을 중심으로 다수의 의석을 확보한 신생 정당 및 무소속 하원의원과 연정을 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네팔 정치의 큰 구심점이었던 공산주의 정당의 입지는 크게 축소되었음.
  - 총선 결과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충격으로부터 회복세를 이어갈 안정적인 정치세력’에 대한 유권자들의 갈망과 네팔의 오래된 ‘파벌 정치’에 대한 피로감 및 심판으로 해석되며, ‘정치 세대교체’에 대한 희망이 동시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됨.
- ◎ 네팔 회의당 중심의 새 정부는 ‘경제회복’과 ‘안정’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두고 다양한 국가 및 국제기구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됨.
  - 경제회복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IMF 프로그램의 개혁정책을 전반적으로 성실하게 추진하되, 특정 정책에 대해서는 국내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조율에 나설 가능성이 있음.
  - 인도와의 외교관계를 회복하고, 중국과는 적절한 수준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양국으로부터 개발자금을 확보하고, 네팔-인도, 네팔-중국 국경 문제 해결에 나설 것으로 보임.
  - 총선 승리를 이끈 데우바(Deuba) 총리의 대표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는 ‘네팔 콤팩트’의 전력 및 도로 인프라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미국과의 외교관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 우리 정부는 남아시아 정세 안정화와 네팔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네팔이 원조 공여국의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 정부는 △인프라 사업 △경제 안정성 강화를 위한 기술협력 △인력 교육에 대한 원조를 확대할 수 있음.



# 한국-베트남 수교 30주년 경제적 성과와 향후 과제

**곽성일** 경제안보전략실장 (sikwak@kiep.go.kr, 044-414-1050)

**김제국**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jegook@kiep.go.kr, 044-414-1039)

- ◎ 한국과 베트남은 경제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상생의 발전 토대를 형성해왔으며, 양국 관계가 성숙한 만큼 협력의 폭과 깊이를 한 차원 더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한국과 베트남의 1992년 12월 22일 공식 외교관계 수립 당시 기준 약 5억 달러였던 교역액은 지난 30년 사이 160여 배 증가하며 2021년에 807억 달러를 돌파함.
  -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공급망 교란, 기후변화, 한반도 정세 악화 등의 글로벌 도전과제가 부상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양국간 경제협력은 1992년 수교 이후 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해야 할 시점임.
- ◎ 2021년 기준 한국은 베트남의 3대 교역 파트너이자 1위 투자국이며, 베트남은 한국의 4대 교역 상대국(누적 기준)이자 아세안 지역 내 최대 개발협력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함.
  - 양국간 교역은 2010년대 들어서면서 노동집약적인 저위기술 품목에서 고부가가치의 중고위 첨단기술 품목으로 바뀜.
  - 한국의 대베트남 직접투자도 2010년대 중반을 전후로 해서 저위기술 제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감소한 반면, 중고급 및 첨단기술 제조업 부문에 대한 투자 비중은 증가함.
  - 공급망 측면에서 최근 5년 사이 한국은 베트남에 의존적인 품목 수가 증가한 반면, 베트남은 품목 수 면에서 한국보다는 중국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됨.
- ◎ 한국과 베트남은 양국 관계의 다가올 미래 30년에 대한 로드맵과 함께 2023년 교역액 1천억 달러, 2030년 1,500억 달러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국은 신흥 중견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베트남과의 협력 로드맵 수립을 통해 국제사회에 대한 새로운 기여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인구 고령화, 인플레이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등 양국이 공통적으로 당면한 과제를 고려한 종합적인 로드맵과 교역 확대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공급망 측면에서 양국은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협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소재·부품 산업의 R&D 및 기술 이전, 베트남의 아세안 지역 가치사슬 참여 지원 등 양국간 협력 고도화가 필요함.



## 한국-베트남 수교 30주년 경제적 성과와 향후 과제

- 한편 베트남은 지식재산권 및 기술 이전 관련 제도의 투명성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만 최근 지체되고 있는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에너지 안보 위협에 따른 중동의 부상과 시사점

**강문수**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중동팀장 (kangms@kiep.go.kr, 044-414-1204)

**유광호**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중동팀 전문연구원 (khryou@kiep.go.kr, 044-414-1165)

-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 G7이 대러 제재를 가하면서 러시아 원유 및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유럽을 중심으로 에너지 안보 위기가 불거짐.
  - 한·중·일 3개국과 인도, 대만 등 아시아 국가는 호주, 카타르, 말레이시아 등지로부터 LNG를 주로 수입하고 있어 러시아, 노르웨이 등의 국가를 통해 PNG를 주로 수입하는 유럽에 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영향을 적게 받고 있음.
  - 대러시아 원유 수입 의존도 역시 약 29.7%에 달하는 유럽과 달리 아시아는 중동(사우디, UAE, 이라크, 쿠웨이트)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한국의 대중동 원유 수입 의존도는 약 60% 수준에 달함.
- ◎ EU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 규제 등을 통해 대러시아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와의 에너지 공급 및 투자 협력이 이어지고 있음.
  - 서방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 규모 감축과 함께 2022년 사우디의 원유생산량이 미국에 이어 2위로 올라섬. - 러시아산 원유의 대중국 및 대인도 수출 규모가 대폭 증가한 반면, 유럽은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와 신규 에너지 공급협약을 체결하고 있어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음.
  -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는 UAE, 카타르, 알제리, 이집트 등의 국가와 LNG 공급협약을 맺었으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대중동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 러-우 전쟁에 따른 에너지 안보 위기에 따라 중동이 유럽의 에너지 공급처로 떠오를 경우 한국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므로, 대중동 에너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중동지역 국가들은 러-우 전쟁 이후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량 증대, 수출 확대를 위해 인프라를 증축하고있으며, 특히 천연가스 생산국(카타르, 알제리, 이집트 등)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한-중동 간 적극적인 투자협력이 요구됨.
  -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중동 내 유·가스전 개발 참여를 통해 지분확보, 석유공동비축 협약 추진, 비축시설 용량 확대를 꾀할 필요가 있음.



## 에너지 안보 위협에 따른 중동의 부상과 시사점

- 또한 중동 내 액화시설 인프라 구축 및 LNG 선박 도입에 능동적으로 대비함과 함께 에너지 관련 시설에 대한 사이버보안 협력도 유망할 것으로 보임.
- 러-우 전쟁 이후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어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확대를 통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믹스 추진도 본격화할 필요가 있음.



# 유럽의 에너지 위기 동향 및 전망

**장영욱**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장 (yojang@kiep.go.kr, 044-414-1221)  
**이철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선임연구원 (cwlee@kiep.go.kr, 044-414-1071)  
**오태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선임연구원 (asroc101@kiep.go.kr, 044-414-1159)  
**이현진**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전문연구원 (hjeanlee@kiep.go.kr, 044-414-1226)  
**임유진**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연구원 (yjlim@kiep.go.kr, 044-414-1064)  
**김초롱**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연구원 (crkim@kiep.go.kr, 044-414-1124)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후 유럽 내 에너지 시장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음.

- 전쟁 발발 후 유럽이 아홉 차례에 걸쳐 대러 제재를 단행함에 따라 러시아산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와 관련 제품에 대한 수출, 수입, 신규투자, 운송이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중단됨.
- 이에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는 파이프라인을 통한 대유럽 천연가스 공급을 지속 감축하였으며, 그 여파로 유럽의 에너지 시장 수급 및 가격 불안정이 지속되는 상황임.
- 유럽의 에너지 위기는 단기적으로 물가상승, 생산비용 증가, 공급망 병목현상을 유발하여 2023년도 경기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EU 및 유럽 주요국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여 보조금 지급, 에너지 소비 절감, 공급원 다변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EU는 2022년 5월 △ 에너지 소비 절감 △ 에너지 공급원 다변화 △ 청정에너지 사용 확대 의 세 가지 정책목표를 담은 REPowerEU 프로그램을 제시함.
- 단기 에너지 사용량 감축을 통해 전력원을 비축하고, 장기적으로 러시아산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 등과의 에너지 공급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 한편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목표를 증대함으로써 에너지 위기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계기로 삼으려 시도하고 있음.
- 개별 EU 회원국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 및 기업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에너지가격상한제 시행, 관련 세금 인하, 초과이윤세 부과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단기적으로 유럽 에너지 위기가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으나, 세계 에너지 시장 가격교란이 지속될 경우 한국의 개별 가구 및 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함.



## 유럽의 에너지 위기 동향 및 전망

- 한국은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서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았으나, 유럽의 LNG 공급 확대로 에너지 시장 내 경쟁이 증가할 경우 장기적으로 비용이 상승할 수 있음.
- 이에 대비하여 보조금 지급 등 유럽이 시행한 정책 일부에 대한 국내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재생에너지 확대, 원자력 협력 등의 의제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됨.